

인권불모지

평양출판사
주체102(2013)년

지금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법석대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대양건너에 있는 미국상전앞에 가서 《북인권》에 대해 떠들어대는가 하면 서울에서 국제회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반공화국 《인권》모략광대극을 벌려놓고는 그 누구의 《인권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에 대해 력설해나섰다.

《정부》의 충실한 거수기, 둘러리역을 놀아대는 《새누리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북인권법》제정놀음에 피대를 돋구며 몸살을 앓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외곡의 기만술수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사실상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곳

은 바로 남조선이다. 현 보수세력이 집권한 후 인권실태는 날로 더욱 험악해져 남조선땅은 말그대로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화하고있다. 이것은 달리될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다.

외세에 빼앗긴 인권

인권은 사람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나라의 자주권이 확고히 고수되면 개별적사람들의 인권도 보장되지만 나라가 망하면 개별적사람들도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고 하

는것이며 국권을 지켜야 인권도 보장될수 있다.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여야 했던 우리 민족의 수난의 력사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오늘도 일제에 의해 전쟁터에 끌려가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던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타는 절규는 외세에게 국권을 빼앗기면 인권이란 도대체 상상조차 할수 없으며 오직 강점자로부터 굴욕과 치욕,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당하게 된다는것을 산증거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인권을 담보하는 국가주권을 외세에게 송두리채 빼앗긴채 미국의 세습령지, 식민지1번지로 전락되였다.

비록 표면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도 있지만 실권은 모두 미국이 틀어쥐고있으며 《정권》이라는것은 말그대로 상

전의 각본과 감독, 엄격한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일뿐이다.

《정책》 하나를 세워도 상전의 눈치를 보고 상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며 《국권》을 상전에게 바쳐 오직 주종관계, 굴종관계만이 존재하는 남조선땅에서 인권이란 한갓 허울뿐이다.

그것은 미국이 강요한 각종 굴욕적인 《협약》과 《협정》들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구체적으로 1966년 7월에 체결된 미국남조선《행정협정》은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 현대판노예문서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과 손해배상을 미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을뿐아니라 미군이 차지한 모든 시설과 지역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원상복구책임을 면제하는 등 미국에 온갖 특권적지위를 부여하게 하는 이 매국협정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은 수십년세월 매일 매 시각 무참히 인권을 유린당하여 왔다.

온 민족과 세상을 경악케 한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학생학살사건은 미군의 인권유린만행의 사례로서 아직도 우리 민족의 기억에 생생하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2002년 6월 13일 오전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에서 14살의 두 녀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무참히 깔려죽는 참사가 빚어졌다. 동무집에 놀러 가던 조양중학교 2학년생들인 신호

순, 심미선은 밀려오는 미군장갑차행렬을 피하여 손으로 두귀를 막고 길 한쪽옆으로 비켜섰다. 앞에는 효순이가 섰고 뒤에는 미선이가 따라섰다. 미제침략군 제2사단 44공병대대소속 장갑차운전수 마크 워커와 그의 조수 페르난도 니노는 미친듯이 그들에게로 장갑차를 몰아댔다. 순간 미선이를 순서로 효순이까지 장갑차의 무한 궤도밀으로 깔려들어갔다. 살인귀들은 하반신만 치워 채 죽지 않은 효순이를 보자 장갑차를 다시 후진하여 그의 머리를 재차 깔아뭉개었다. 효순이의 짓이겨진 머리에서는 골수가 쏟아져 길바닥에 뿌려졌다.

당시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학생 학살사건에 대하여 남조선잡지 《말》은 《폭 3.3m의 좁은 그 길에 대형트럭과 군

인들의 차량들이 끊임없이 질주했다. 그냥 서있기에도 무서운 도로였다. 효순이, 미선이가 사고를 당한 그 지점에 두 아이중한 아이의 신발 한짝이 떨어져있었고 미군들이 먹다 버린 군인식량봉지가 떨어져있었다. 쫓기는 신발, 배를 채우는 식량봉지, 그것은 너무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미군들에게 이 땅의 민중들은 다만 언제든지 사냥가능한 한마리 쫓기는 짐승에 불과한것인가. …》라고 하면서 미군에게 당한 민족적울분을 강하게 터치였다.

귀여운 딸들을 잃은 부모들의 가슴속에는 피눈물이 고이였고 온 남조선땅에 원한의 울부짖음이 차고넘치였다. 하지만 극악한 살인마들은 너털웃음을 치며 술집을 찾아다니였고 미군부대에서는 추모식이 아

니라 불꽃놀이가 벌어졌다. 남조선 각지가 반미로 끓어번지자 미국은 범죄자들에 대한 기만적인 《재판》놀음을 벌였으며 그후 《무죄》를 선언하고 본국으로 빼돌렸다.

이것은 미군이 남조선땅에서 저지른 반인권적범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목포행렬차집단강간사건, 화순탄광로동자집단학살사건, 독도어장공습사건, 로근리학살사건, 마산재실학살사건, 거창량민대학살사건, 미군수렬차습격조작사건, 부평소년직승기궤짝사건, 동두천녀인뺨끼사건, 동두천녀인삭발사건, 파주나무군사살사건, 고철주민집단구타사건, 미군고엽제살포사건, 동두천부부살해사건, 택시운전기사집단감금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등 《해방자》, 《원조자》의 간판을 달

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가는 곳마다
에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 살해한 반인권적범죄사건들을 열거
하자면 끝이 없다.

남조선당국의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1945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의 반
인권적범죄수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와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수십만건에 달한
다. 지난 5년간 언론과 사회단체가 발표한
미군범죄건수만도 2008년 183건, 2009년
306건, 2010년 377건, 2011년 341건,
2012년 344건에 달하였으며 이것은 선임
《정권》시기에 비해 22%나 늘어난것이라
고 한다.

현 보수세력이 집권한 올해에 들어와 미
군범죄는 더욱 성행하고있으며 특히 3월달
에는 미군범죄월간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

을 다투며 사건들이 발생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항시적인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지난 3월 2일 밤 남조선강점 미군병사 3명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마구 공기총을 쏘아대는 란동을 부리다가 차를 타고 도주하는 사건이 터졌다.

통보를 받고 사건현장에 나타난 남조선 경찰들이 차를 타고 추격하자 미군범죄자들은 오히려 경찰과 함께 여러대의 차량과 2명의 주민을 들이받는 흉악한짓을 하고 저들의 소굴로 뺑소니치고말았다. 처벌이 두려워 달아나야 할 범죄자가 오히려 경찰들을 위협하다못해 부상까지 입히고 달아난 파렴치한 망동에 사람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해하였다.

그때로부터 불과 2주일도 채 못되어 14일 경기도 평택에서는 미군병사가 20대 여성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어 16일에는 술에 취한 4명의 미군병사들이 술집주인을 성희롱하고 그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다음날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미군병사가 위생실변기를 부시며 란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2시간후에는 또 다른 곳에서 미군이 계단에서 경찰을 밀쳐 굴러떨어지게 하여 무릎을 상하게 하는 란동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고 할 정도로 미군의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과 고통속에 날과 달을

보내여도 현 보수집권세력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대신 《미국과의 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느니, 《미군범죄는 경미한 교통사고나 경범죄, 당사자간 합의가 능한 폭행사건 등 구속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느니 하며 오히려 미군의 인권유린만행을 두둔해나서거나 기껏해서 상전에게 《대책마련》을 구걸하는데 그치였다.

실패가 이러하니 서울 한복판에서 총을 쏘아대며 란동을 부린 미군범죄자는 사건 발생경위에 대해 묻자 《재미삼아 사람을 향해 모의총기를 발사했다.》고 뼈젓이 말하는 정도이다.

남조선사회 각계와 여론들은 미군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당국의 사대주의에 의한 미국눈치보기로 범죄자에 대

한 솜방망이처벌》에 있으며 《솜방망이처벌이 미군범죄를 부추긴다.》고 평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최근 빈발하는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응축하여 보여준다. 한미SOFA라는 법제도가 불평등하고 한국 관료들은 미국눈치보면서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미군들은 한국인과 한국의 법제도를 업신여긴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인은 미군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그에 합당한 처리를 보지 못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개탄하였다.

이것이 바로 《국권》을 외세에게 빼앗긴 남조선의 인권실상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이 외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것은 삶의 보금자리마

저 미군에게 빼앗기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룡산미군기지에서 류출된 폐유가 기지는 물론 그 주변토지를 심히 오염시킨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남조선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토지의 오염은 한계선을 훨씬 넘었으며 그것을 원상대로 복구하는데 10년이상 걸리고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고 한다. 죄는 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고 이 환경파괴범죄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썩워지고있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오염된 지하수를 마신 기지주변 주민들속에서 각종 질병들을 앓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이다. 미군은 이미 1990년대부터 기지내의 지하수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오염에 대해 알리 없는 기지주변 주민들은 지하수를 마셨고 그로 인해 현재 암을 앓는 사람과 사망자률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높다는것이다.

룡산미군기지뿐만아니라 반환된 미군기지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

올해 남조선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동안 조사한 17개 미군반환기지가운데 16곳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고 심한 곳은 기름에 의한 오염이 기준치의 85배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토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1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온다.

물론 이것은 《캠프 캐롤》미군기지주변 인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들을 암과 백

혈병, 피부질환,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등 죽음의 병마에 시달리게 한 고엽제 매몰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종식되지 않는 미군의 생태환경파괴에 의해 남조선전역은 환경오염지대로, 불모지로 화하고있다.

참으로 남조선인민들은 미군범죄피해로 인해 향불도 많이 태웠고 장례도 수없이 치르어왔지만 강점자인 미군에게 있어서 그들은 죽이든 짓밟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한갓 식민지노예에 불과하며 남조선땅은 독성물질을 마구 내던지어도 무방한 하나의 거대한 오물장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외세인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인민들에게 입힌 인적, 물적피해를 총 집계하면 근 50조

US\$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인권을 담보하는 자주권이 없는 탓으로 빚어지는 참혹한 후과이다.

하지만 현 보수집권세력은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의 적이며 재앙의 화근인 미군을 더 증강시키고 막대한 유지비까지 섬겨바치는것도 모자라 새로운 군사기지까지 제공해주려고 하고있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지금 남조선강점 미군이 상전과 합의되었던 규모보다 근 9 000명이나 늘어난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9년전에 미국본토로 철수하였던 미육군 23화학대대 250여명을 남조선에 끌어다 재배치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수를 계속 증강시키였다.

그리고 현재 《방위비분담금》을 올리라고 강요하는 상전과의 회담탁에 끌려다

니고있다. 이에 대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있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과 남조선국방부의 통계를 종합하면 남조선은 이미 65%이상을 부담하고있으며 저평가된 부동산임대가치와 루락된 미군기지이전비용 등을 더하면 분담률은 70%를 넘을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현 보수집권세력은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어 2015년까지 12만평규모에 달하는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하여 미군무력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제주해군기지가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수십척의 대형함선과 지어 항공모함까지 정박시킬수 있게 설계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이것은 현 보수집권세력이 의도적으로 인권범죄자들을 늘이고 범죄자들에게 좋

은 서식장을 마련해주는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여러 기회마다 남조선과의 관계를 《린치핀》에 비유하고있다.

《린치핀》이란 영어로 축에 꽂는 핀이라는 말이다. 외교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는 뜻도 담고있다. 미국은 이전에 주로 미일동맹관계를 표현할 때 쓰던 이 용어를 현재는 남조선에 대해 쓰고 대신 일본에는 《코너스톤(주춧돌)》이라는 말을 쓰고있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상전의 이런 태도에 감지덕지해하면서 《린치핀》과 《코너스톤》은 다같이 《핵심동반자》라는 의미이지만 《린치핀》이 외교적으로 한단계 격이 더 높은 표현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강화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5월 미국행각 전기간 현 보수집권 세력은 상전과의 《포괄적전략동맹》에 대하여 떠벌이며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한다면서 돌아치였는가 하면 미국회 상하량원합동연설이라는데서는 《희망을 향한 우정의 합창이 지난 60년간 쉬임없이 울려퍼졌다.》느니,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력설하여 민심의 지탄을 자아냈다.

이것은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억울한 죽음과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강요한 미국의 인권범죄의 력사에 대한 외곡이 아닐수 없다. 결국 남조선인민들의 참혹한 인권상황의 원인은 《국권》을 외세에게 빼앗긴데 있으며 현 보수집권세력의 골수에 배긴 친미사대정책에 있는것이다.

파쑈독재에 짓밟힌 인권

오늘 남조선에서는 력사의 시계바늘을 과거의 파쑈암흑시대로 되돌리려는 현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유신》독재가 부활하고있다.

민주와 파쑈는 량립될수 없으며 파쑈독재가 부활하고있는 곳에서 인권이란 존재할수 없다.

그것은 지금 남조선에서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태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정보원이 지난해 《대통령선거》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에 야당후보를 비방하

는 글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올리고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현 집권자의 당선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사건이다. 이것은 현 집권세력이 권력기관을 불법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시켜 근본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보수 《정권》을 연장하고 《유신》독재를 부활시킬것을 노린 용납 못할 정치깡패행위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응당 대통령사퇴에로 이어질수 있는 사건이며 리승만역도의 《3.15부정선거》나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을 합친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치쿠데타로 낙인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책임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요구는 남조선전역과 해

외에서 시국선언발표, 초불대회, 초불집회, 초불문화제, 시위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빠난 현 보수집권세력은 방송과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대학생들의 시위투쟁을 파썸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정보원이 《YTN》의 《정보원대선개입사건》과 관련된 특종보도에 개입하여 중단시키는가 하면 청와대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쓴 한 야당원의 기사제목을 수정할것을 언론사에 강요하였으며 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다룬 《MBC》의 《시사잡지 2580》항목은 방송조차 되지 않았다. 이미 언론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쥔버리고 《정권》의 어용나팔수, 권력의 추악한 시녀로 전락된지 오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 조사기간 초불집

회에 대한 보도를 단 한건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동아일보》는 정보원규탄초불집회때문에 시민은 화를 낸다고 현실을 외곡선전하였다. 지난 7월 6일에 진행된 초불집회는 2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만여명이 참가한 그때 당시까지는 최대 규모의 초불집회였지만 《KBS》, 《MBC》, 《SBS》 방송 3사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재벌회장 아들의 물놀이사망소식을 주요뉴스로 다루어 인민들이 정국을 옳바로 인식할수 없게 횡방을 놀아댔다. 그런가 하면 경찰들은 지난 6월 21일 대낮에 정보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후 가두시위를 벌리는 29명의 대학생들을 강제련행하였으며 23일 밤에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초불문화제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분사하여 한 고등학

교 학생의 눈에 상처를 입히는 파쏘탄압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은 《정권말기에나 있을법한 일들이 정권초기에 일어나고있다.》, 《5년전 MB정권과 똑같은 현상이다. 당시에 MB는 소통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물대포와 련행으로 짓밟았고 급기야 사과를 해야 했다.》, 《MB의 전철을 밟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 실태는 파쏘독재가 부활하는 곳에 인권이란 존재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입증해주는 동시에 현 보수집권세력이 입만 벌리면 떠들어대는 《자유민주주의》가 다름아닌 파쏘독재라는것을 시사해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참혹한 인권상황은 오

늘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이
여지없이 탄압을 당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올해 광주인민봉기
33돐을 계기로 진행한 광주인민봉기기념
행사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불리워온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못하게
하였다. 지어는 이 노래를 말살하기 위한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파쇼독재에 항
거하여 목숨바쳐 싸운 련사들의 투쟁정
신과 다시는 민중을 억압하는 폭압통치
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있
는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사랑을 받
고있다. 이 노래를 말살하려는것은 남조
선에서 《유신》독재통치시기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민주화의 싹도 가차없이 짓밟

개버리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선임자들도 감히 손대지 못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마수를 뻗치며 그것을 부르지 못하게 한 현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은 군부독재시기에도 찾아볼수 없었던 파썸적망동이다.

광주항쟁렬사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민주화정신을 외곡말살하려는것은 남조선사회를 철저히 보수화, 파썸화하기 위한 현 보수집권세력의 음모가 절정에 달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이를 두고 사회 각계가 《시대착오적인 파썸적행위》, 《력사와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리념공격》, 《우리가 살고있는 지금이 리승만시대인가, 유신독재시대인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오늘날 현 보수집권세력의 파썸독재로

하여 가장 가혹한 인권탄압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진보세력들과 통일애국세력들이다.

그것은 현 보수집권세력이 사상 류레 없는 반인권적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할 대신 그것을 집권유지의 도구로 삼고 진보세력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쑈폭압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력사에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가혹한 법으로 악명높았던 고대노예사회의 《마누법전》과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를 종교 재판에 걸어 화형에 처한 《카톨릭교회법》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악법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민족 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 고통

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독한 법은 일찌기 없었다.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래왕하면 《잠입, 탈출죄》(6조), 북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편의를 제공하면 《편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가장 극악한 파썸악법이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지난 7월 17일 파쑈 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김세창조직위원을 긴급체포하였다.

그가 지은 《죄》란 평생을 로동현장에서 고통받는 로동자대중의 삶과 자주통일운동을 위해 투쟁해온것이다. 극악한 반통일행적으로 온 겨레의 저주를 받아온 리명박《정권》도 여러차례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에 대해 탄압과 구속을 하였지만 민심이 두려워 불치병으로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상태의 그를 체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현 보수집권세력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정당한 3자련대활동을 《보안법》상 제4조(목적수행)와 제7조(찬양, 고무 등), 제8조(회합, 통신 등)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김세창위원을 잡아가는데 이어 그의 활동을 소위 간첩죄로 몰아가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있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5월 24일 민족의 대국상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간 로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가혹한 형벌을 들썩웠고 또 암진단을 받고 생사기로에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 까지 로수회부의장의 《밀입국》을 도왔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보다 앞서 5월 21일련북통일을 주장하며 진보적인 언론활동을 벌린 《자주민보》 대표 리창기에 대한 2심공판놀음을 벌려놓고 그를 《회합통신, 찬양고무》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에 걸어 징역형에 처하였다.

검찰당국은 또한 인터넷을 통해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통일아침》 홈페이지의 사무국장과 그 회원 3명에 대한 기소놀음을 벌여놓았으며 6월 26일 현 보수 집권세력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반대하여 범민련 북, 남, 해외 본부가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을 걸고들면서 정보원과 수십명의 경찰을 내몰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의장대행을 비롯한 주요성원들의 집들에 대한 폭압적인 강제압수수색놀음을 벌렸다. 이와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차장과 대외협력국장이 그 무슨 《북의 대남투쟁로선을 수용》하고 《리적활동》을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씌워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한 한 남조선

작가에게 《보안법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징역형을 들썩우는 폭거를 감행하였는가 하면 검찰당국이 한 영화감독에게 인터넷에 복을 찬양하는 《리적표현물》을 올렸다는 혐의를 씌워 박해를 가하였다.

지어 법무부 장관이란자는 《50년대 랭 전시기보다 지금의 안보가 더 위태롭다.》느니, 《표현의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저들의 이런 폭압소동에 대해 정당화하였다.

전쟁을 반대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말해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표현해도 《보안법위반》, 이런 파썸적폭거는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인권유린이다.

《보안법》에 의한 현 보수집권세력의

탄압이 얼마나 광란적으로 벌어졌으면 남조선인민들이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자주와 통일을 념원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소환, 체포, 구속, 고문, 유죄판결 등이 빈번히 감행되고있다.》,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야만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지성적인 만행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억이 막힌다.》고 단죄하고있겠는가.

얼마전 남조선에 왔던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백히 보장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제적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남조선의 인권

유린상황을 폭로하였다.

현 보수집권세력의 인권탄압책동은 《국회》에서 그 무슨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것을 조작하여 각계층 인민들의 통일애국운동을 완전히 봉쇄, 말살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애국이고 정의이며 그 길에 나선 사람들은 애국자로 찬양되어야 마땅하다. 또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민족의 숙원이고 지향인 통일을 부정하는것은 곧 인권부정이고 인권유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수집권세력은 법원이 통일운동단체들을 《반국가단체》,

《리적단체》, 《범죄단체》로 판결하고도 강제해산시킬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 단체들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라는것을 조작해냈다. 그 대상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면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 보수집권세력들은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통일운동단체들을 강제해산시킬수 있는 《법》적무기를 쥐게 된다. 이것은 극악한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애국인사들을 마구 탄압처형

하다못해 통일운동자체를 제도적으로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 현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동시에 남조선사회가 더욱더 참혹한 파썸독재의 란무장, 인권의 동토대로 화하고있다는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민생고에 짓눌린 인권

생존권은 인간의 초보적인 요구인 동시에 인권의 필수적전제이다.

생존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이 생존을 못하고서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논의할수 없기때문이다.

원래 근로대중의 생존권이 유린되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남조선과 같이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를 무참히 빼앗기고 불행과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회는 찾아볼수 없다.

남조선에서 인간의 생존권이 여지없이 말살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노동권이 철저히 유린되고있는데서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노동권은 생존권의 기초이며 초보적인 요구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실업자가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지난해에는 460여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고용되어 낮은 임금에 쪼들리는 반실업자가 860만명에 달하는가 하면 대학졸업생의 절반이상이 교문을 나서자바람으로 실업자로

전략되고있다. 여기서도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CBS》방송이 밝힌데 의하면 20대의 경제활동참가률이 불과 60.1%로서 사상최악의 수준에 달하며 10명중 4명이 완전한 무직업자들인것으로 하여 그 수는 1년전보다 15만명이상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20대가운데서도 대학졸업을 전후한 20대후반이 특히 심각하다. 빚을 내어 비싼 등록금을 메우고도 졸업해 봐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 새해 벽두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라고 개탄하였다.

오죽 실업사태가 심각하면 20대의 90%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 장기간 취직을 못하고있는 대학졸업생에 대해서는 《장미족》, 31살이 되

면 취직할수 없다는데서 《삼일절》, 20살도 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뜻에서 《이퇴백》이라는 말이 유행어로 나돌고있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의 가혹한 인권상황은 빈민층들이 주택난, 생활난에 허덕이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집값이 2007년보다 36%이상 뛰여오르면서 전체 주민세대의 45%에 달하는 700여만세대가 거처할 집이 없어 하루하루를 뜨내기생활로 연명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세방살이조차 할수 없어 0.5~1평 되나마나한 쪽방, 판자집, 천막, 짐합, 움막 등 집안닌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올해 《주간경향》 1월 22일부에 실린

《특집—겨울나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기사 내용에 의하면 서울역주변에서 로숙하는 사람들이 수백명이나 되며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촌에는 방을 빌린 단기체류자가 650~7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단기체류자들은 세로는 1m 80cm, 가로는 1m 남짓한 습도가 높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쪽방에서만도 하루밤에 8 000원, 한 달에 23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는 또한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넝마공동체》(남녀가 섞여있는 도시빈민들의 자활공동체) 주민 26명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집합에서 살다가 그것마저 지난해 《불법시설물》이라며 철거되었다는 사실도 전하였다. 이것은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있는 집없는 빈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일부에 지나지 않

는다.

생활난이 경각에 다달은 사람들도 이루어야될수 없다.

남조선에는 지금 생활상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는 절대빈곤층은 570여만명,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은 250여만명 등 삶의 막바지에서 신음하는 빈곤층이 1 00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극심한 생활난은 아이들에게까지 재난을 가져다주고있다.

어느 한 민간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는 극심한 생활난으로 가정이 파괴되어 부모가 아닌 다른 가정이나 이리저리한 단체들에 의해 양육되는 일명 《빠꾸기아이》들만 해도 무려 9만 7 0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생존권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으며 자살은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직후 12월 21일 한진중공업 복직로동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아래와 같이 써있었다.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자들의 횡포에 졌다. 심장이 터지는것 같다. 내가 못 가진것이 한이 된다. 민주로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악질자본...》

여기서 158억원은 한진중공업측이 금속로조에 업무방해를 리유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다. 그는 생활고와 회사의 로조탄압으로 인해 자살한것이다.

하루뒤인 22일에는 현대중공업 비정규
직로동자가 해고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
여 자살하였다. 최근에 충청남도 아산 현
대자동차 비정규직로동자도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지금 해
고자,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자살은 끊기
지 않고 계속되고있다는데 대해 폭로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마련
하지 못하여 휴학과 과외로동을 하거나
의학생체실험에 내몰리던 끝에 자살의 길
을 택하고 한 녀작가가 먹다 남은 밥이
있으면 좀 달라는 글을 써놓고 굶어죽었으
며 국제체육경기에 대표선수로 나갔던 체
육명수가 생활고를 비판하여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녀성들속에서 자식과

함께 동반자살하는 일도 나타나고있다.

지난 4월 21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여성이 2살과 생후 2주가 갓 넘은 아들을 흥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고 앞서 9일에는 인천 남구에서 30대 여성이 4살 난 아들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자살하였다. 3월에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40대 주부가 6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흥기로 찌르고 자살, 2월에는 청주에서 40대 주부가 9살 난 딸을 흥기로 찢러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들이 자살과 자식살해를 동반한것은 《내가 죽으면 자식이 많이 힘들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는데서였다.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은 지금 자살률에 있어서 세

계 1위, 《자살왕국》의 수치스러운 오명을 쓰고있다.

이런 험악한 인권실태는 남조선사회에 《생활형분노의 시대》를 펼쳐놓았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별치않은 일을 가지고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는 생활형분노가 많아져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언론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생활형분노의 시대》, 《한국인에게 분노가 일반적인 정서가 되었다.》, 《분노라는 파괴적에너지가 확산되면서 한국자본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현 보수집권세력이 말로는 《민생정부》, 《국민행복시대》

를 제창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재벌위주의 반인민적정책을 실시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그 실례의 하나가 현 집권세력의 쌍룡자동차사태처리문제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때 현 보수집권세력은 《선거》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운명이 달린 쌍룡자동차사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런데 집권후에는 《국정조사》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방해가 된다는니 뭐니 하는 구실을 대며 그것을 반대하였다. 지어 경찰들을 내몰아 쌍룡자동차사태를 공정하게 해결할것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강제연행하였으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웨쳤다고 하여 김정우 쌍룡차지부장을 구
속하였다.

경영상태가 개선되면 해고자들을 우선
적으로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쌍룡자동차
회사측은 현 보수집권세력들의 묵인과 비
호밑에 그들의 처지를 모르는체 하고있다.
쌍룡자동차해결을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
을 끊은 사람들만 해도 현재 24명이나 된
다고 한다.

한진중공업사태와 현대자동차사태도 다
를바 없다.

로동자들의 요구란 부당하게 해고된 자
기들을 복직시키고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달라는것이다. 그러나 현 보수집권세력은
이 요구마저 묵살하고 경찰들을 내몰아
살인광풍을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이 한 줌도 못되는 재벌들의 이익을 여전히 옹호 하면서 절대다수 근로인민들의 이익을 짓밟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로동자들이 일터와 가족을 떠나 계속 철탑에 올라 룡성투쟁을 벌리게 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것이 새누리당이 말하는 인권인가.》, 《민중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당국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민생대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울분을 터치고 있다.

여기서 잠깐 현 보수세력이 집권하였을 때 민심의 요구가 무엇이였는가를 4자성어를 놓고 보기로 하자.

현 보수세력이 집권하였을 때 민심은 앞으로 기대하는 점을 간략하여 표현

한 4자성어로 세상을 구하고 민생을 구제하길 바라는 뜻을 나타내는 《구세제민》을 첫번째로 뽑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소언다행》을 두번째로 뽑았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을 표현한 4자성어로는 《공언무시》(빈말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를 선택해 《선거》공약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 보수집권세력은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4대중증질환치료비 전액부담, 반값등록금 실시, 기초로령연금 20만원 지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주요민생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하였다. 취임식이전에 벌써 핵심공약 150개중 70개가 백지화되었다. 또한 민

중과의 합의나 동의를 없이는 철도, 가스, 전력부문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것이라고 한 《선거》공약도 꺾버렸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말로만 《민생정부》요, 《국민행복시대》요 하면서 열심히 부르짖을뿐 사실상 막대한 자금을 무력증강에 류실하고있다.

《뉴시스》(2013년 7월 10일)에 따르면 현 보수집권세력이 래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보다 6.9% 늘어난 36조 8 845억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 《련합뉴스》(2013년 7월 25일)는 국방부가 5년간 《국방예산》을 214조 5천억원으로 계획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 5년간 무기도입에 드는 금액

은 70조 2천억원, 《전력운영비》는 144조 3천억원으로서 《국방비》 규모사상 처음으로 될것이라고 여론들은 평하고있다.

이 거대한 《국방비》이면 현 보수세력이 집권할 때 당시 약속한 주요민생공약들을 충분히 리행하고도 수십조원이나 남는다고 한다.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현 보수집권세력이 《민생정부》요, 《국민행복시대》요 하며 내걸었던 간판들이 다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여 권력을 차지하고 정치적잔명을 부지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허위와 기만의 능수로서의 현 보수집권세력의 추악한 정체가 날이 갈수록 드러나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현 보수집권세

력에게 더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침을 뱉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민권련대)는 《현 정부는 이미 민중의 버림을 받았다.》라는 성명에서 현 《정부》는 민중사기《정부》라고, 만일 이러한 사기가 없었다면 집권할수 없었을것이라고 개탄하였다. 사회 각계는 《민생이 이렇게 고단한데 현 정부의 상황인식은 매우 안이하고 공약은 지키지 않고있어 심각한 민생위기가 발생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려는 정치적술수를 부리고있다.》고 현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정책을 규탄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민생정부》, 《국민행복시대》를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남조선사회의 인권실상이다.

원인없는 결과, 결과를 낳지 않는 원인
이란 없듯이 모든 사회현상은 일정한 원인
에 의하여 생겨난다.

오늘 남조선사회가 인권불모지, 인권의
동토대로 전락되고있는것은 현 보수집권세
력의 친미사대와 파쑈독재, 반통일적이며
반인민적정책의 필연적산물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수집권세력이
상전인 미국과 함께 있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걸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벌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저들의 최악
의 인권상황과 반인권적범죄를 덮어버릴뿐
아니라 세계여론을 오도하여 공화국의 대
외적영상을 흐리게 하고 공화국을 반대하
는 국제적인 공조를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다. 이것은 저들의 뿌리깊은 《체제통

일》야망,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에 대해 분주탕을 피우지 말고 제 집마당에 쌓여있는 인권문제나 제대로 처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인권불모지

집필	김성호			
장정	박봉혁			
교정	박원국			
낸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쇄	주체102(2013)년	8월	8일	
발행	주체102(2013)년	8월	10일	
